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ty Well-Be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Policy Target Groups for Non-Preferred Facilities

김 세 운*·한 창 목**·정 현***

Kim, Sae Woon·Han, Chang Mook·Jeong, Hyun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설계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선호시설 정책의 정책 만족정도에 따른 집단을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대기환경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만족집단의 경우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대기환경 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민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만족집단에서는 이웃 간 소통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로

** 공동저자,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실 초빙연구원

*** 교신저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논문 접수일: 2023. 4. 4. 심사기간: 2023. 4. 4. ~ 2023. 4. 27. 게재확정일: 2023. 4. 27.

책불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은 이미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 집단 간 비교에 있어 차이 점을 확인하였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보다 전/월세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정책만족집단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빈도분석을 통해 정책만족집단은 평균소득이 더 높으며, 비선호시설 정책에 만족하여 자가보유자가 거주 안정성을 갖고 있어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반면,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이동성이 적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 간의 특성에 유의하여 지역인접도나 인접지역 간 혜택의 수혜/비수혜 지역 간의 정책효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커뮤니티웰빙요인, 삶의 만족도, 비선호시설정책, 위계적 회귀분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community well-be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The research subjects were residents of Seo-gu, Incheon, where a metropolitan landfill is located. Based on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non-preferred facilities policy, the groups were classified into policy satisfaction and policy dissatisfaction group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se two groups.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 the policy dissatisfaction group, air quality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but for the policy satisfaction group, it was not, indicating that the effect of air quality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is minimal for those already satisfied with the non-preferred facilities policy. The policy dissatisfaction group is more sensitive to non-preferred facilities policies, such as landfill sites, indicating that policy approaches to supplementing this issue are needed. For the policy satisfaction group, neighbor communication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but it was not for the policy dissatisfaction group, suggesting that the latter may have a low level of trust in the community due to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non-preferred facilities policy. Finally, the occupancy type of residential areas showed different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with higher life satisfaction reported among renters and lessees in the policy dissatisfaction group than in the policy satisfaction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effects on neighboring areas and the benefits of policy utilization for both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area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groups.

□ Keywords: Community Well-being Factor, Life Satisfaction, Non-preferred Facility Polic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 서론

사회가 다원화되고 파편화됨에 따라 커뮤니티웰빙은 더욱 더 중요해졌다. OECD Regional Wellbeing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개인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38개 응답국 중 전체 2위, 교육에 대한 만족은 36개 응답국 중 3위로 높게 나온 반면,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37개 응답국 중 37위, 2018년 기준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서는 37개 응답국 중 최하위인 37위, 개인의 삶의 만족은 전체 37개 응답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시스템, 교육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터전이 되는 환경,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커뮤니티의 공동체, 개인의 궁극적 삶의 지향점인 삶의 만족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요인을 반영하여 웰빙을 측정하는 커뮤니티웰빙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웰빙은 지역사회 수준의 웰빙에 대한 측정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을 고루 포함하며, 지역사회의 객관적 지표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상태를 함께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영화 외, 2015).

커뮤니티웰빙 요인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요인들을 확인하여 이웃 간의 관계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만족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역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삶의 만족도와 연결하여 커뮤니티 내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웰빙을 구성함에 있어 지역사회 내의 웰빙 단위를 측정할 때, 비선호시설의 입지는 커뮤니티웰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선호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 위협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발전 저해, 경제적 손실 등의 다양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들인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구치소, 교도소, 고압변전소와 같은 시설들은 님비현상의 사례가 되고 있으며, 정부와 다양한 보상의 협상을 통해 입지를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입지 이후에도 관리유지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지역민들의 만족과 불만족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회환경, 행정서비스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티웰빙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위치하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시설인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고자 했다. 선행연구들은 커뮤니티웰빙의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커뮤니티웰빙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비선호시설 정책의 만족도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만족집단, 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개인의 파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대한 사회적 자본을 주요 변수로 삼는 커뮤니티웰빙 요인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만족, 불만족집단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비선호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대상으로 하며, 커뮤니티웰빙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비선호시설로 1992년 시설의 형성 및 시설운영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관민 간 갈등을 겪어왔다(정원욱·김숙진, 2016; 신상준, 2017).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해 인천지역에서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관리할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폐촉법 시행 이후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게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족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대처하는 역량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집단 비교 기준으로 삼아, 정책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간의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배경은 2021년이며, 연구자료는 2021년 행정학회에서 발간한 '서구 주민행복 측정 및 행복정책 선순환체계 개발연구'의 '2021년 인천광역시 서구의 정책고객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커뮤니티웰빙과 삶의 만족도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논의는 국가, 기관마다 실무활용측면에서, 또는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기영화 외, 2014). 장기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GDP를 설정하여 측정해왔으나, 사회의 발전상태나 정부의 수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beyond GDP'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Simth & Hoekstra, 2011). GDP는 경제적 혹은 물리적 측면에 한정하여 측정할 수 있는 획일적인 지표라는 특성 때문에, 비경제적이나 비물리적인 측면(사회, 문화, 환경 등)의 측정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측정지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기영화 외, 2014).

특히, 1970년대 들어 경제적 성장 외에도 삶의 질이나 행복 등의 요소와 관련된 측면이 부각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복지의 관심과 집중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기영화 외, 2014; 김혜정, 2015). 웰빙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합의는 없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적 합의보다는 웰빙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목표 혹은 지표를 설정하는 측면에 집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혜정, 2015). 실제로 커뮤니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개인의 웰빙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웰빙은 공동체 단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혜정, 2015). 또한, 이와 맞물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가 점차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존재의의와 역할, 책임 등이 강조되었다. 지방정부의 존재의의와 가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대체로 합의되어 있고(Maass, 1959; 이승중, 2005; 서재호 외, 2012), 지역 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과 객관적인 복지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역할과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미애·이승중, 2016).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웰빙은 지방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이 현실을 적실하게 반영한 측정지표가 될 수 있다.

웰빙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수요와 만족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Prilleltensky et al, 2006), 현재의 상태와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서재호 외, 2016). 한편, 웰빙이 삶의 질, 행복, 만족, 건강 등과 혼용되나, 웰빙은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만족을 강조하여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Alber et al, 2008; Noll, 2002). 즉, 공동체라는 일정 규모의 집단적 영역을 측정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지표의 특성을 가진 점이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 차이라고 볼 수 있다(Wallace et al, 2009).

커뮤니티는 일정한 공간 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직체로(Roffey, 2013), 공간적 특성과 비공간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Murphy & Kuhn, 2001). 이러한 특성에 따라 커뮤니티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함께 영위하여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서재호 외, 2012).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를 시·군·구 및 읍·면·동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치하는데 적합한 수준의 집단으로 보고 있다(이승중 외, 2020).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커뮤니티웰빙은 공동체 내 개인과 공동체의 집합적인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승중, 2012).

다만,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나 이론적 모델의 부재로 인해 명확한 정의를 통해 규명할 수 없으나, 공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웰빙은 개인 수준이 아닌, 지역사회 수준에 맞춘 웰빙 측정이다. 둘째, 커뮤니티웰빙의 주된 요소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적·환경적·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다(기영화 외, 2013). 셋째,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은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조건(객관적 웰빙)과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정서 상태를 측정(주관적 웰빙)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기영화 외, 2014). 한편,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조건들에 대해 주민들이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웰빙과 관련한 자료를 통해 진행된 연구가 커뮤니티웰빙의 본질을 적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elliwell & Putnam, 2004; 기영화 외, 2015).

한편,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가 지방정부의 종합적 사회지표와 부합하는지가 커뮤니티웰빙의 이슈 중 하나이며,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지표가 주민복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인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서재호 외, 2012). 또한, 커뮤니티웰빙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의 측정이 핵심 쟁점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웰빙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Christakopoulou et al., 2001; Forjaz et al., 2011; Markovich et al., 2018; McCrea et al., 2016; Miles et al., 2008; VanderWeele, 2019). 즉, 각 지표는 복합지표의 특성을 가지고 커뮤니티 내에서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의 영역을 다차원적으로 포괄하여 구성되어 있다(이승중 외, 2020). 특히, Kee et al.(2015)은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을 차원(dimensions)과 영역(domains)으로 나눈 커뮤니티웰빙(community wellbeing, CWB) 모델을 제시하고, 3개의 자산을 토대로 파생된 6개의 자본,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1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했다. 또한, 본 모형은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에서 2013년부터 2년마다 수행한 설문조사로 수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커뮤니티웰빙 측정의 세부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CWB 모델을 토대로 커뮤니티웰빙의 세부측정 지표를 구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했다. 다만,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이라는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선호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본을 선별하고 해당 자본에 속하는 세부측정 지표를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커뮤니티웰빙의 측정방법 중 개인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웰빙의 핵심은 만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의를 선행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족은 단순히 표현하자면, 개인 스스로가 일상에서 심리적으로 조급함 없이 느끼는 편안한 느낌을 말한다(정현 외,

2017). 특히, 본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은 일상의 활동에서 기쁨을 얻고 스스로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주된 목표를 성취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말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되었다(이효재 외, 1979). 삶의 만족도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이나 만족, 욕구 성취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지만(임선영, 2020; 유동균·정현, 2022),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부분에서 개인의 모든 생활을 포함하여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백은령, 2002).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국가나 문화에 따라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에, 규범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통해 측정하는 것은 찬반의 의견이 과거부터 존재해왔으나(이희철·구교준, 2019), 경제·사회·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Nussbaum, 2003).

한편,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문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오병록, 2014). 개인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커뮤니티웰빙 수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김용진·안건혁, 2011; 박성복, 2012; 정현·전희정, 2019), 커뮤니티웰빙은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가치와 같다. 또한, 행정학적 측면에서 만족도 측정은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 그리고 서비스 등 커뮤니티웰빙의 영역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안상유·정원식, 2014; 정현 외, 2017), 주체와 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Kelly & Swindell, 2002; 이원욱·김영오, 2007).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커뮤니티웰빙의 각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각 개인에게 수집한 정량화된 만족도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2.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비선호시설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된 사회구성원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정수연·박현수, 2001; 남창우 외, 2010; 김지수 외, 2016). 보통 비선호시설은 인간의 기본적 생활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환경과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사회기반시설이다(박길용, 2007; 김근식,

2008; 김도연, 2011). 한편, 부정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혐오시설, 님비시설(Not in My Back Yard; NIMBY)이라고 통칭하기도 하나 이러한 명칭은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용어로, 최근에는 다소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비선호시설로 명명하고 있다(김도연, 2011). 이종훈 외(2007)는 비선호시설의 유형을 위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사회통념시설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핵폐기물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또는 매립장, 공동묘지와 납골당, 교도소, 정신병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비선호시설은 입지한 지역 내 환경과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갈등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김도연, 2011). 다만,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최화식(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입지갈등의 영향요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해당 지역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지가하락, 교통 및 환경문제 발생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여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성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Morell, 1990). 다음으로, 비선호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에 따른 공포와 관련된 기술적 요인이 존재한다(부만근, 1996). 비선호시설의 기술적 요인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각종 불안함으로 각종 정보들을 불신하게 된다(Kearney & Smith, 1994). 셋째, 비선호시설의 입지 선정과 운영과정 상 공개성, 투명성, 합리성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요인이 있다(Lober, 1995). 입지선정과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입지에 대한 피해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Kasperson et al., 1992). 넷째, 주민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와 가치, 신뢰 등 공동체가 정부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제도적 측면이다(Petts & Eduljee, 1994). 정부의 입지선정 방식, 제도적 수단결여, 행정능력 불신 등 제도적 측면이 입지선정상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양세훈, 2008).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와 관련있는 환경적 요인이며, 특히 환경문제는 소음이나 분진, 대기오염, 악취 유발 등 입지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갈등요인이 된다(Mazmanian & Morell, 1990).

상기와 같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갈등유발의 요인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고 해결하는 방안 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이선우 외, 2015; 조경훈·정경락, 2020). 정책수용성은 학자들마다 정의가 상이 하나 대체로 수용과 순응, 동조 등은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최연홍·오영민, 2004), 특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외적 가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식 또는 태도의 정도를 순응(acceptance), 혹은 수용(complianc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도연, 2011). 다만,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 특정 규율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수용

은 외연적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여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구분하고 연구도 존재한다(Ducan, 1981). 그러나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의사를 표명하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반응과 태도를 고려한다면, 수동적인 개념에 가까운 순응보다는 정책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수용의 개념이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윤정현, 2007; 조경훈·정경락, 2020). 결론적으로, 정책수용은 정책순응 보다 확정된 개념이며 주어진 정책에 대하여 정책대상집단이 이를 수용 혹은 거부할지에 대한 의사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주관적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재근·권기현, 2007; 윤정현, 2007).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비선호시설이 가지고 있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요인이다. 비선호시설이 입지한 지역은 지가하락, 생활여건 악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지만, 반면 비선호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사회 전반의 구성원과 공유하게 된다(김도희, 2001). 비선호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주민들이 받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지만, 이 보상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상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수용성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조경훈·정경락, 2020). 다음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가지고 있는 냉소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나 정책에 대한 신뢰와 관련한 부분 역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itrin, 1974). 통상 비선호시설은 공익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냉소주의에 영향을 받아 이와 관련된 정책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냉소주의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우울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이 있으며, 각 심리적 요인을 토대로 냉소주의가 형성되어 정책수용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조경훈·정경락, 2020). 한편, 비선호시설 입지가 결정되고, 실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에 따라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완충할 경제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경제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공공부문의 정책추진 과정상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 등으로 냉소주의를 완화함으로써 심리적 요인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비선호시설인 수도권매립지가 입지한 인천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정책대상집단을 구분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구정운영을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고,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입지한 지방정부 상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도시(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¹⁾. 구체적으로,

1) 서구청이 제안한 ‘(환경)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해방’의 전략은 총 16개의 정책을 제안했고, 8개가 완료 및 8개 추진중으로 총 88.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음(한국행정학회, 2021).

비선호시설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만을 위한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 끊임없는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통해 서구만의 중장기적인 자원순환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개최 및 ‘서구 자원순환 정책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등 서구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적 의사결정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적으로 유해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월마을 주민을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여 유소건자에 대한 추적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라는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는 인천 서구청을 중심으로, 비선호시설과 관련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대상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커뮤니티웰빙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의 흐름은 크게 이론과 실증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인 부분은 커뮤니티웰빙의 정의와 지표, 영향요인 등에 집중하여 탐구되었다. 기영화 외(2014)는 커뮤니티웰빙의 이론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소개하면서, Smith & Hoekstra(2011)의 휴먼웰빙과 자본이론에 입각하여 자원과 자본을 포함하는 다차원의 CWB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CWB 모형의 6자본 영역과 세부지표를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고차요인분석 등 통계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검증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된 모형을 제시했다. 이지은(2020)은 CWB 모형을 토대로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인식 연구를 Q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증했다.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파악하여, 기존 AHP 분석만 수행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과 가치 등을 발견하여 새로운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웰빙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분석을 위해 유형을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연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승중 외(2020)는 기존의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에 활용하는 주관적 및 객관적 자료 수집에 한계를 제시하고, 객관과 주관인 아닌 간주관적 방법을 측정에 활용하여 커뮤니티웰빙을 측정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커뮤니티웰빙의 복잡성을 지표에 담아내기 위해 거버넌스 자본을 추가하여 기존 CWB 모형을 보완한 수정 CWB 모형을 제시했다.

한편, 커뮤니티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거나, 커뮤니티웰빙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 분석하는 등의 커뮤니티웰빙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적 흐름이

존재한다. 최영출(2018)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를 커뮤니티로 설정하여 커뮤니티 단위에서 커뮤니티웰빙 수준을 측정한 후, 향후 커뮤니티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IPA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웰빙 여건을 구성하는 각 자본별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여 사분면 상 위치하여 만족도가 낮지만 중요도가 높은 분야를 도출했다. 이준영·최낙혁(2018)은 커뮤니티웰빙의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커뮤니티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요소가 중요함을 증명했으며, 특히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한정된 지방정부의 인적·물리적 자원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구성원의 관계와 연결, 그리고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이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수립에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최민호 외(2019)는 26개 시군구의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평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27개 지자체의 효율성 지수를 파악했다. 또한, 잔여분 기반 모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각 자본별 여유분값과 최적화값을 실증 제시했다.

다음으로, 비선호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비선호시설과 관련한 입지 선정과정상 갈등발생 요인과 해결방안 제시 등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김도희(2001)는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실제적 집행과정을 통해 갈등유발요인을 탐색하고, 사업추진단계별(입지선정, 시설공사 집행, 시설운영 및 관리 등) 발생하는 주요 갈등유발요인을 제시했다. 경제적 보상이나 기술적 안정성, 위해성 등 어떤 요인이 주민입지갈등에 중점적인 요인이 되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강성철 외(2004)는 비선호시설 입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지방정부간 갈등사례를 토대로 갈등발생부터 증폭, 완화 및 해결기로 진행되는 시간적 가변성을 고려한 전개과정을 유형화했다. 또한, 각 단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행태적·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범주화한 이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최항순·이형만(2010)은 갈등유발요인을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문화적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입지갈등이 심화되는지 완화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그 과정상 갈등조절 요인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의 활동이 종속 및 독립변수 간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갈등해결방안의 새로운 매개자의 역할을 증명한 바 있다.

한편, 정주용·길종백(2007)은 비선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갈등 없이, 경쟁적으로 시설입지를 수용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논의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는 주민의 수용성 증진을 위해 회피요인 감소전략과 감소요인 강화전략을 활용했으며, 부지공모방식과 같이 상향식 접근을 통한 의견수용을 통해 갈등유발을 최소화하여 비선호시설의 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김도연(2011)

은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했고, 공정성, 집행능력, 투명성, 홍보활동, 신뢰성, 의사소통, 보상합의, 피규제경험 등에 대한 주민의 인식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비선호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전부터 지자체와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증명했다. 조경훈·정경락(2020)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부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웰빙 및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 도출하지 못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인천 서구’라는 특정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웰빙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종속 및 독립변수 간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가 활용한 자료와 달리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을 반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커뮤니티웰빙 측정지표가 아닌, 지리적·산업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구축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현실에 적합한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만족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독립 및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비선호시설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과 관련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비선호시설이 입지한 이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이 입지하고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정책 진행에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였고, 만족도를 토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웰빙과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세부 독립변수를 살펴봄으로써, 비선호시설의 정책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변수 및 가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에서(서재호 외, 2012; 서인석·이승중·기영화, 2014), 지역사회의 다양한 웰빙수준을 종합한 커뮤니티웰빙 요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커뮤니티웰빙 지표가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최민호·강영웅·이승중, 2019),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커뮤니티웰빙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가설 및 모형을 설정하는데 있어 연구의 대상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지역 내 대기·수질·녹지 등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비선호시설’의 특성상 쓰레기매립지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의 개념틀에서 ‘비선호시설’과 관련이 있는 대표영역으로 사회환경과 행정서비스 영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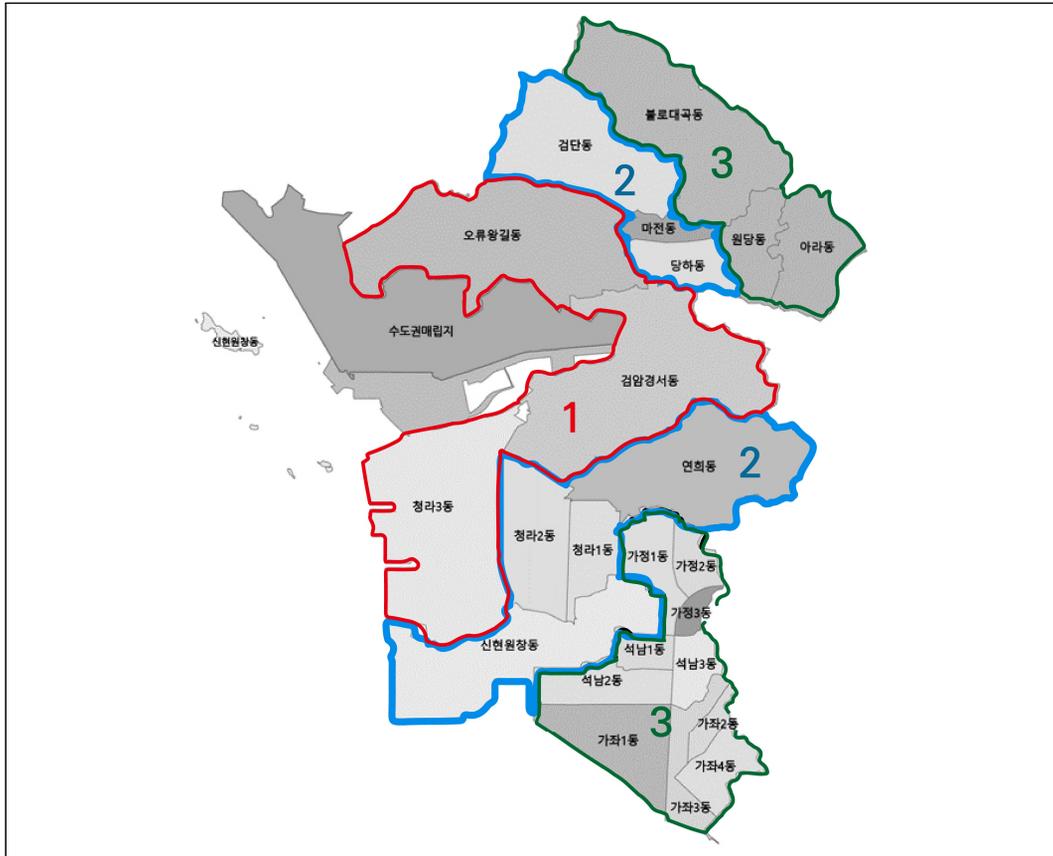
분류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집단 비교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관련 정책 만족도	정책불만족집단(0) 정책만족집단(1)
독립 변수	사회환경	이웃 간 소통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정책결정 참여 수준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대기 환경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녹지 환경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수질 환경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분류		변수	조작적 정의
행정서비스		공무원 친절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구청 민원처리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공무원 책임의식 만족도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1/5~5/5점)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성=0, 남성=1
		연령	20~29세=1, 30~39세=2, 40~49세=3, 50~59세=4, 60~69세=5, 70세 이상=6
		지역인접성	매립지와 직접 닿아있을 경우(1) 매립지와 직접 닿아있지 않지만 인근에 위치할 경우(2) 매립지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경우(3)
		혼인유무	미혼=0, 기혼=1(이혼/별거, 사별 포함)
		점유형태	전/월세=0, 자가=1
		가족수	가구원 수
		학력	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4, 대학원 이상=5(각 과정의 재학, 중퇴 등 모두 포함)
		직업유무	없음=0 있음=1
		월 소득	100만원 미만=1, 200만원 미만=2, 300만원 미만=3, 400만원 미만=4, 500만원 미만=5, 600만원 미만=6, 700만원 미만=7, 800만원 미만=8, 900만원 미만=9, 900만원 이상=10

주1: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관련정책 만족도의 집단별 비교 기준은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한 응답자 중 매우불만족, 불만족을 표한 응답자를 정책불만족집단으로 만족 및 매우 만족을 표한 응답자를 정책만족집단으로 분류함

특히 이번 연구의 경우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에 있어 시설과의 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비선호시설과의 거리를 반영한 지역인접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지역인접성은 연구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행정동 중 수도권매립지와의 인접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매립지와 직접 닿아있는 경우 1, 매립지와 직접 닿아있지 않지만 인근에 위치할 경우 2, 매립지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경우 3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각 기준에 해당하는 서구 행정동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역인접성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설정함에 있어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참여의 측면을 감안해 정책에 불만족하는 집단이 정책에 무관심한 집단이 아닌, 오히려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능동적 시민(active citizen)일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일찍이 Kraft & Clary(1991)는 비선호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넘비(NIMBY)라는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모습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은 인천 서구의 정책고객들로 지역주민 중에서도 평소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공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고객 중 인천 서구의 쓰레기매립지 정책에 만족하는 집단보다 불만족하는 집단일수록 지역의 자치행정 및 사회환경 요인들에 관심이 많고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범주별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비선호시설 정책에 만족하는 집단보다, 불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사회환경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정(+)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설 1-2. 비선호시설 정책에 만족하는 집단보다, 불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행정서비스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정(+)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웰빙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과 불만족하는 집단 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수용성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비선호시설 정책을 설득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인 심리적 요인은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경훈·정경락, 2020; 김도희, 2001). 통상적으로 비선호시설은 지역의 입장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만이 아닌 긍정적 외부효과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설치된 인천 서구 지역은 지역 내 정주여건 악화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으로 인해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서구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편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불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는 집단 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비선호시설 정책에 불만족하는 집단일수록 사회에 대한 냉소주의로 흐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역 내 소속감과 소통과 같은 커뮤니티웰빙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만족/불만족 집단 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Citrin, 1974; 이준영·최낙혁, 2018).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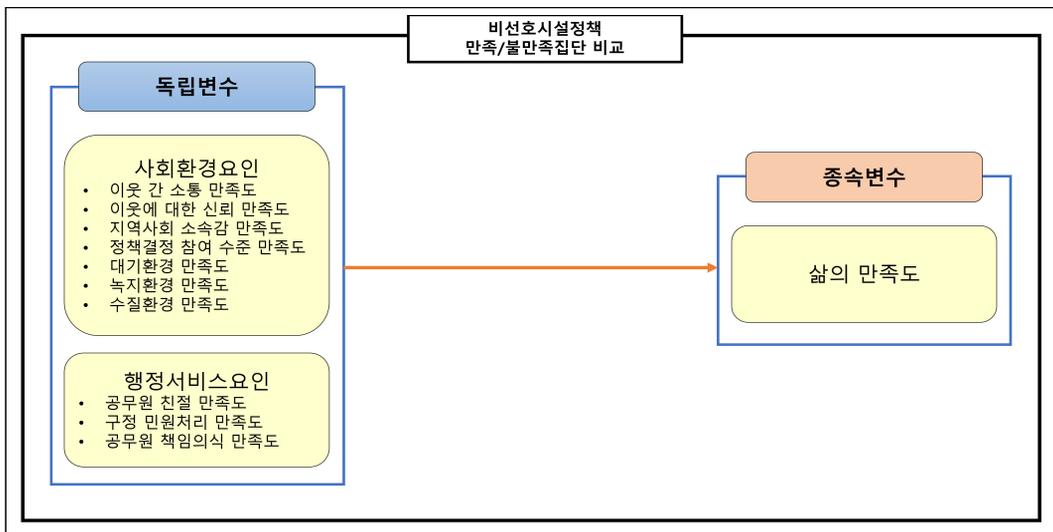
가설 2.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과 불만족하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모형 및 자료

본 연구는 2021년 한국행정학회에서 발간한 '서구 주민행복 측정 및 행복정책 선순환체계 개발연구'의 '2021년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고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인천 서구에서 장기간 거주하였고 서구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있는 지역주민(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행복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자료이다(오영균 외 5인, 2021). 인천광역시 서구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곳으로 해당 자료를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웰빙 요인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주민의 만족/불만족 여부가 커뮤니티웰빙 과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변수 및 가설을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2>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IV. 연구 결과

1. 응답자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은 <표 2>와 같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 만족도의 경우, 만족 응답자가 463(69.3%)명, 불만족 응답자가 205명(3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398명(59.6%), 남성이 270명(4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0대가 26.2%(175명), 40대 24.1%(161명), 50대 20.2%(135명), 20대 19.8%(1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접성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인접 정도에 따라 가장 인접한 오류왕길동 집단은 18.4%(123명), 그 다음으로 인접한 검단동 집단은 44.3%(296명), 가장 먼 집단인 불로대곡동 집단은 37.3%(249명)

로 나타났다. 혼인유무는 기혼자가 64.2%(429명), 미혼자가 35.8%(239명)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형태의 경우 자가 76%(508명), 전, 월세가 24%(160명)로 나타났다. 가족수의 경우 4명이 39.2%(26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명 26.2%(175명), 2명 15.4%(103명), 1명 10.2%(68명), 6명 0.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가 69.5%(4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9.2%(128명), 대학원 10.5%(70명), 초등학교 0.6%(4명), 중학교 0.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가 75.3%(503명), 직업이 없는 경우가 24.7%(165명)로 나타났다. 월소득의 경우, 400만원 미만이 17.8%(119명), 600만원 미만 15.6%(104명), 300만원 미만 13.8%(92명), 500만원 미만 12.1%(81명), 900만원 미만 9.6%(64명), 700만원 미만 8.5%(57명), 800만원 미만 7.5%(50명), 200만원 미만 6%(40명), 900만원 이상 5.5%(37명), 100만원 미만 3.6%(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 특성

항목		빈도(%)	
응답자 특성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관련 정책 만족도	1, 2점 응답자	205(30.7%)
		4, 5점 응답자	463(69.3%)
	성별	여성	398(59.6%)
		남성	270(40.4%)
	연령	20-29세	132(19.8%)
		30-39세	175(26.2%)
		40-49세	161(24.1%)
		50-59세	135(20.2%)
		60-69세	63(9.4)
		70세 이상	2(0.3%)
	지역인접성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 청라3동	123(18.4%)
		검단동, 마전동, 당하동, 연희동, 청라1~2동, 신현원창동	296(44.3%)
		블로대곡동, 원당동, 가정1~3동, 석남1~3동, 가좌1~4동	249(37.3%)
	혼인유무	미혼	239(35.8%)
		기혼 (이혼, 별거, 사별 포함)	429(64.2%)
	점유형태	전, 월세	160(24.0%)
		자가	508(76.0%)
가족수	1명	68(10.2%)	
	2명	103(15.4%)	
	3명	175(26.2%)	
	4명	262(39.2%)	
	5명	59(8.8%)	
	6명	1(0.1%)	

항목			빈도(%)
	학력	초등학교	4(0.6%)
		중학교	2(0.3%)
		고등학교	128(19.2%)
		대학교	464(69.5%)
		대학원	70(10.5%)
	직업유무	없음	165(24.7%)
		있음	503(75.3%)
	월소득	100만원 미만	24(3.6%)
		200만원 미만	40(6.0%)
		300만원 미만	92(13.8%)
		400만원 미만	119(17.8%)
		500만원 미만	81(12.1%)
		600만원 미만	104(15.6%)
		700만원 미만	57(8.5%)
		800만원 미만	50(7.5%)
900만원 미만		64(9.6%)	
900만원 이상	37(5.5%)		

다음의 <표 3>의 기술통계 값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모두 668명이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은 3.26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사회환경에서는, 녹지환경 만족도의 평균값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정서비스의 경우, 공무원 책임의식 만족도의 평균값이 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

항목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668	1	5	3.26	.891
독립변수	사회환경	이웃 간 소통 만족도	668	1	5	3.02	.919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	668	1	5	3.06	.834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668	1	5	3.10	.889
		정책결정 참여 수준 만족도	668	1	5	3.12	.936
		대기환경 만족도	668	1	5	2.67	1.058
		녹지환경 만족도	668	1	5	3.31	1.014
		수질환경 만족도	668	1	5	2.79	1.096
	행정서비스	공무원 친절 만족도	668	1	5	3.10	.910
		구청 민원처리 만족도	668	1	5	3.14	.927
공무원 책임의식 만족도		668	1	5	3.16	.964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2개(정책불만족집단, 정책만족집단)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각각의 모형에 대해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이란,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독립변수들을 차례대로 투입하여 두 단계 이상 진행하며 도출된 회귀모형의 모형적합도(설명력)와 각 변수의 유의성을 검토하는 회귀분석을 의미한다(이학식, 2012).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성별, 연령, 지역, 혼인유무, 거주형태, 가구원수, 학력, 직업, 소득)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 모형에서는 사회환경요인(이웃 간 소통 만족도,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정책결정 참여 만족도, 대기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수질환경 만족도)을 투입, 최종 3단계 모형에서는 행정서비스 요인(공무원 친절 만족도, 구정 민원처리 만족도, 공무원 책임의식 만족도)을 투입하였다.

1) 정책불만족집단 모형

정책불만족집단의 첫 번째 모형적합도는 다음과 같다(R^2 0.172).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모형보다 사회환경요인을 투입한 2단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모형 개선이 이루어졌다(ΔR^2 0.410). 행정서비스요인을 투입한 3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모형 개선이 이루어졌다(ΔR^2 0.425). 또한, 잔차 간의 독립성 확인을 위한 Durbin-Watson 검증결과 결과치는 2.000으로 오차항간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중공선성 값인 VIF 값 또한 모두 10 이하의 값으로 나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불만족집단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는 성별, 혼인유무와 점유형태, 월 소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분석결과 1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 혼인유무가 기각되었으며, 새롭게 투입된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 대기환경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 분석결과, 2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변수들을 모두 계승하며, 새롭게 투입된 공무원 친절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종분석에 활용되는 3단계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점유형태, 월 소득,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 대기환경 만족도, 공무원 친절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점유형태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세보다 자기를 소유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불만

족집단에 있어서 이동의 자유가 비교적 원활한 전/월세 보다 자가를 보유한 집단이 비선호시설로 인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월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용한 자원이 많아져 다양한 취미생활을 비롯한 긍정적 심리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와 이웃에 대한 신뢰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미조 외(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커뮤니티웰빙요인 중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개인의 사회적 통합이 높아지며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환경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한 대기환경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친절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명철(2013)의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지방정부 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병섭 외(2015)의 연구는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삶의 질 수준에 따라 상대적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본 연구의 적용에 있어 정책불만족집단과 정책만족집단 간의 상이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대적 효용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4〉 정책불만족집단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분류		변수	분석치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값	2.982***	.762	.818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251*	-.141	-.160
		연령	-.004	-.039	-.038
		지역인접성	-.075	.034	.026
		혼인유무	.421**	.129	.151
		점유형태	-.775***	-.646***	-.700***
		가족수	.059	-.026	-.041
		학력	.011	.094	.093
		직업유무	.111	.080	.102
		월 소득	.079***	.051*	.051**
독립 변수	사회환경	이웃 간 소통 만족도		.111	.120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245***	.232***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		.321***	.284***
		정책결정 참여 수준 만족도		-.008	-.075
		대기환경 만족도		.188*	.153*
		녹지환경 만족도		-.004	-.005
		수질환경 만족도		-.002	.010

분류		변수	분석치		
			1단계*	2단계	3단계
행정서비스		공무원 친절 만족도			.273***
		구청 민원처리 만족도			-.067
		공무원 책임의식 만족도			-.059
$R^2(Adjusted R^2)$			0.172	0.410	0.425
F			5.709***	9.855***	8.922***
$\Delta R^2 / \Delta F$			0.209/5.709***	0.248/12.227***	0.022/2.603*
Durbin-Watson			2.000		

2) 정책만족집단 모형

정책만족집단의 첫 번째 모형적합도는 다음과 같다(R^2 0.063).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모형보다 사회환경요인을 투입한 2단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모형 개선이 이루어졌다(ΔR^2 0.288). 행정서비스 요인을 투입한 최종모형인 3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모형 개선이 이루어졌다(ΔR^2 0.301). 또한, 잔차 간의 독립성 확인을 위한 Durbin-Watson 검증결과 결과치는 1.944로 오차항간 자기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중공선성 값인 VIF 값 또한 모두 10 이하의 값으로 나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만족집단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는 성별, 혼인유무와 점유형태, 학력, 월 소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분석결과, 1단계의 변수를 모두 계승했으며, 추가적으로 연령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새롭게 투입된 변수 중에는,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종모형인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성별이 기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연령, 혼인유무, 점유형태, 학력, 월 소득, 이웃 간 소통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 공무원 친절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유무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유형태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자가보유자가 전/월세 거주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의 분석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정책만족정도에 따라 주거이동 유동성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월 소득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대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웃 간 소통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 간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
족도도 높아진다.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종합적으로 이웃 간 소통, 지역사회 소속감, 이웃에 대
한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무원 친절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의 친절한 행
정서비스 제공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정책만족집단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분류		변수	조작적 정의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값	2.364***	.739**	.518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186**	.117*	.106
		연령	-.024	-.095**	-.092**
		지역인접성	-.014	-.020	-.031
		혼인유무	.222**	.166*	.172*
		접유형태	.218**	.157*	.176**
		가족수	-.010	-.022	-.015
		학력	.120*	.129**	.140**
		직업유무	-.022	-.009	-.003
		월 소득	.058***	.044***	.043***
독립 변수	사회환경	이웃 간 소통 만족도		.080	.091*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162***	.161***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		.305***	.260***
		정책결정 참여 수준 만족도		.019	-.031
		대기환경 만족도		.024	.013
		녹지환경 만족도		.038	.018
		수질환경 만족도		.001	-.018
	행정서비스	공무원 친절 만족도			.104*
		구청 민원처리 만족도			.018
		공무원 책임의식 만족도			.061
$R^2(Adjusted R^2)$			0.063	0.288	0.301
F			4.476***	12.696***	11.468***
$\Delta R^2/\Delta F$			0.082/4.476***	0.231/21.445***	0.017/3.691**
Durbin-Watson			1.944		

3) 비교분석 및 분석 종합

정책불만족집단과 만족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점유형태, 월 소득,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 공무원 친절 만족도이다. 이중 월 소득,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와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는 모두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유형태의 경우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책만족집단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은 전/월세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가 자가 보유자 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정책만족집단에서는 자가보유자가 전/월세 거주자 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정책만족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다. 최화식(2012)의 연구는 비선호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되며, 이에 따른 지가하락, 교통 및 환경문제 발생으로 인해 주민생활 전반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정책불만족집단은 비선호시설 관리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기에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이동의 자율성이 전/월세 거주자에 비해 떨어지는 자가보유자의 개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책만족집단의 경우, 현재 비선호시설 정책에 만족하기에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혜택과 관리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거주 안정성을 더 높게 느껴 자가보유자가 전/월세 거주자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비선호시설과의 거리인접성에 따른 차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비선호시설에 인접할수록 비선호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선호시설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거리 인접성을 통제하기 위해 비선호시설과의 인접거리에 따른 지역인접성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본 연구가 실질적으로 거리에 따른 집단구분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인접정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진 못했으며,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 간의 특성에 유의하여 지역인접도나 인접지역 간 혜택의 수혜/비수혜 지역 간의 정책효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시설관리 상태 공개 등을 통한 주민들의 공포감 해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남창우·최화식, 2010: 151). 공무원 친절 만족도는 정책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맥락에서의 공무원의 친절 정도가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가 비선호시설입지 대상 지역주민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선호시설입지 지역주민 모두가 공무원 친절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비선호시설 입지의 특성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Petts & Eduljee(1994)는 지역공동체의 태도나 가치, 신뢰는 지역주민들이 정부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상태이기에 고려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비선호시설입지 정책 등에 있어 지자체와 주민간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통한 성공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도출해야한다. 김도연(2011)은 비선호시설 입지 필요성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지자체와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함을 입증했다. 지역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친절감을 느끼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넘어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시민들의 정책수용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비선호시설과 같이 민감한 시설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투명성과 친절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양적, 질적 서비스의 개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비선호시설 인근지역과 그 외 지역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대기환경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리에 대한 불만이 있기에, 대기환경이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책만족집단에서 대기환경 만족도가 기각된 것은, 정책만족집단은 비선호시설 관리 정책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기에, 대기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만족집단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만족집단에서는 연령, 혼인유무, 학력, 이웃 간 소통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가 비선호시설에 입지했다는 사실은 부모나 고령층에게 있어서는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젊은 층의 경우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반대급부로 설치된 공원 및 신도시인 송도와의 인접성, 지역발전 등이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을 친환경타운과 테마파크로 바꾸었으며 제2매립지 또한 놀이시설, 도시농업단지,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이 입점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목표를 세워두었다. 이외에도 1992년 수도권 매립지 조성 당시 인근 지역이 농촌에 불과하였으나,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쳐 생활권 전반에 청라국제도시, 한강신도시, 검단지구 등의 각종 지역개발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위치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에는 2023년 2월 기준 59.6만 명이 거주하는 등 지역발전의 혜택을 받아왔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 매력적인 인근 지역 등이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까지 놀이시설, 도시농업

단지,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이 입점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목표를 세워두었다. 혼인유무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간 소통 만족도는 이웃 간의 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지역사회 소속감과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이웃 간 소통 만족도는 기각되었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이미 정책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이 낮아진 상태로, 주민 간의 협력과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겪지만, 정책만족집단의 경우, 원활한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과 논의에 용이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비선호시설 정책 시행에 있어 정책불만족집단의 요구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비선호시설 관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정현·정문기, 2019).

V. 결론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정책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불만족집단과 정책만족집단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이론적·제도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요인을 재구축하여 삶의 만족도와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비선호시설정책에 대한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CWB모형에서 비선호시설정책의 정책만족집단에 따른 비교를 위해 모형을 재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대기환경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만족집단의 경우 비선호시설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대기환경 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책불만족집단의 경우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의 비선호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 직접적으로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을 토대로 정책의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에 있어, 비선호시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지역주민과 적극적 소통을 위해 추진한 소통협력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구청장실’, 디지털플랫폼으로서 ‘소통1번가’, 지역주민과 정부 간 쌍방향 의견교류가 가능한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셜미디어’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사례들은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관리정책들로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정책만족집단은 이웃 간 소통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고, 이는 해당 집단의 경우 이미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다. 이에 공동체의식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 집단 간 비교에 있어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보다 전/월세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와, 정책만족집단과의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정책만족집단의 평균소득이 정책불만족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의 경우, 비선호시설과 인접한 지역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이동성이 전/월세 거주자에 비해 떨어지기에 개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만족집단의 경우, 현재 비선호시설 정책에 만족하기에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혜택과 관리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거주 안정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자가보유자가 전/월세 거주자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 간의 특성에 유의하여 지역인접도나 인접지역 간 혜택의 수혜/비수혜 지역 간의 정책효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비선호시설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사례의 대표성과 보편성의 한계를 지닌다. 인천광역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은 상징적인 비선호시설로 언급되지만, 수많은 방폐물처리장, 원전, 교정시설 등 비선호시설의 유형과 다양성의 측면에서의 대표성의 한계를 지닌다. 또한, 표본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만을 한정적으로 설정하여, 보편성의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개선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실증적인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성철·문경주·문유석. (2004). 지방정부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요인분석. 「지방과 행정연구」, 16(1): 31-62.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 권미조·이준영·최낙현. (2018).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 경기도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1): 339-363.
- 권혁. (2022). 지역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 커뮤니티 웰빙 수준 측정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5(6): 1289-1309.
- 기영화·김윤지·남채봉. (2015).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 비교: 서울시 6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33-62.
- 기영화·서인석·이승중. (2014). 커뮤니티웰빙 이론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자원(Resource) 영역, 자본(Capital) 요소, 하위지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3): 243-269.
- 기영화·이승중. (2012). 커뮤니티 웰빙 모형개발. 커뮤니티 웰빙 국제포럼. 미간행 자료집(2012. 6. 24-25.).
- 기영화·정서린. (2018).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지방행정연구」, 32(2): 183-210.
- 김근식. (2008). 비선호시설 건설정책에서의 딜레마 형성과 해소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건설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4): 83-121.
- 김도연. (2011). 비선호시설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 대구교도소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1): 65-92.
- 김도희. (2001).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1): 165-188.
- 김용진·안건혁. (2011).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2(6): 89-99.
- 김재근·권기현. (2007).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173-200.
- 김지수·심준섭·윤태섭. (2016). 비선호 시설 입지지역의 지역 특성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13(3): 51-71.
- 김태훈·서인석·기영화. (2014).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적합성분석: 경쟁가설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2): 81-109.
- 김혜정. (2015). 시민의 신뢰와 참여에 따른 커뮤니티 웰빙 영향분석: 아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 143-164.

- 남창우·최화식. (2010). 비선호시설 지역주민의 갈등과 피해유형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1): 151-172.
- 박길용. (2007).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7(3): 147-176.
- 박성복. (2012).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주관적 영향요인. 「한국행정논집」, 24(4): 983-1010.
- 백은령. (2002).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ion) 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리뷰」, 7: 111-125.
- 부만근. (1995).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상집단의 대응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인석·이승중·기영화. (2014).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 Kee 모형의 6개 자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2): 175-202.
- 서인석. (2017).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커뮤니티웰빙의 6개 자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2): 67-103.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 안상유·정원식. (201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35.
- 양세훈. (2008). 「비선호시설 건립정책에서 순응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병록. (2014).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5(3): 1-18.
- 오영균·최영출·권향원·신상준·이지은·한창묵. (2021). 「서구 주민행복 측정 및 행복정책 선순환체계 개발연구」. 한국행정학회.
- 유동균·정현. (2022). 생활권 내 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통접근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113: 75-95.
- 윤정현. (2007).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수용성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우·김광구·심준섭·류도암·조경훈·김지수·박형준. (2015). 갈등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공공갈등의 예방과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319-343.
- 이승중·이지은·이혜림. (2020). 커뮤니티웰빙 지표 구축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9(2): 173-208.
- 이승중. (2005).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이재준·이상문. (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39-55.
- 이준영·최낙혁. (2018).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 27-52.

- 이중훈·권혁일·김연식·이만형. (2007).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인과지도 작성과 정책 대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8(1): 151-171.
- 이지은. (2020). Q 방법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웰빙 인식유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3): 151-183.
- 이학식. (2012).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집현재.
- 이효재·지순·박매자. (1979). 한국 저소득층노인생활에 관한 사회. 「경제 및 공간 문제 연구」. 한국 문화연구원 논집.
- 이희철·구교준. (2019). 역량 중심의 국민행복지수: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 115-140.
- 임선영. (2020). 학업스트레스, 종교성향이 기독교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 22: 223-244.
- 신상준. (2017). 공공갈등에서 정부의 갈등관리-수도권매립지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연구」, 20(2): 55-82.
- 정수연·박현수. (2003). 혐오시설입지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대상으로. 「부동산학연구」, 9(2): 87-98.
- 정주용·길종백. (2007). 비선호시설 입지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255-324.
- 정원욱·김숙진. (2016). 수도권매립지 입지갈등의 전개: 네트워크 효과로서의 영역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4): 541-558.
- 정현·탁성숙·정문기. (2017).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 동대문구 회기동과 서대문구 홍은 1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9(3): 509-535.
- 정현·전희정. (2019). 근린환경과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 91-110.
- 정현·정문기. (2019).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1): 3-36.
- 조경훈·정경락. (2020). 비선호시설의 수용성에 대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복지패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0(3): 29-52.
- 최민호·강영웅·이승중. (2019). 기초자치단체 삶의 질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23(3): 329-356.
- 최연홍·오영민. (2004). 정책 수용성의 시간적 변화: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방 입지 갈등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3(1): 297-319.
- 최영출. (2020). 커뮤니티웰빙 수준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33-52.
- 최형순·이형만. (2010).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3): 437-459.

- 최화식. (2012). 비선호시설의 유형별 입지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5(4): 123-151.
-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02.20. 검색).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Alber, J., Fahey, T., and Saraceno, C. (Eds.). (2008). *Handbook of quality of life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London: Routledge.
- Christakopoulou, S. Dawson, J., and Gari, A. (2001).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 321-351.
- Duncan, W. J. (1981). *Organizational Behavior*, 2n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Forjaz, M. J., Prieto-Flores, M.-E., Ayala, A., Rodriguez-Blazquez, C., Fernandez-Mayoralas, G., Rojo-Perez, F., and Martinez-Martin, P. (2011). Measurement properties of the Community Wellbeing Index in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20(5): 733-743.
- Helliwell, J. F., and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Kasperson, R. E., Golding, D., and Tuler, S. (1992). Social distrust as a factor in siting hazardous facilities and communicating risk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61-187.
- Kearney, R. C., and Smith, A. A. (1994). The low-level radioactive waste siting process in Connecticut: Anatomy of a failure. *Policy Studies Journal*, 22(4): 617-630.
- Kee, Y., Kim, Y., and Phillips, R. (2015). Modeling community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Learning and community approaches for promoting well-being* (pp. 1-15). Springer, Cham.
- Kelly, J. M., and Swindell, D. (2002). Service quality variation across urban space: First steps toward a model of citizen satisfaction. *Journal of urban affairs*, 24(3): 271-288.
- Kraft, M. E., and Clary, B. B. (1991).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NIMBY syndrome: Public response to radioactive waste disposal.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4(2): 299-328.
- Lober, D. J. (1995). Why protest? Public behavioral and attitudinal response to siting a waste disposal facility. *Policy Studies Journal*, 23(3): 499-518.
- Maass, A. (1959). *Area and Power: A theory of local government*. the Free Press.

- Markovich, Julia, Monika Slovinec D'Angelo, and Thy Dinh. (2018). Community Wellbeing: A Framework for the Design Professions. *Ottawa: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 Mazmanian, D., and Morell, D. (1990). The NIMBY syndrome: Facility siting and the failure of democratic discourse.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agenda*, 233-250.
- McCrea, R., Walton, A., and Leonard, R. (2016). Developing a model of community wellbeing and resilience in response to chan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9(1): 195-214.
- Miles, R. L., Greer, L., Kraatz, D., and Kinnear, S. (2008).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a central Queensland case study.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4(1): 73-93.
- Morell, D. (1984). Siting and the Politics of Equity. *Hazardous Waste*, 1(4): 555-571.
- Murphy, B. L., and Kuhn, R. G. (2001). Community: Defining the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In: *Report completed for the Canadian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sation.*
- Noll, H. H. (2002).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Theoretical framework and system architec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3): 47-87.
- Nussbaum, M. C., and Glover, J. (1995). Women, culture, and development: A study of human capabi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Regional Well-Being. (2023). <https://www.oecdregionalwellbeing.org/index.html>
- Petts, J., and Eduljee, G. (1994).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facilities.* John Wiley & Sons Ltd.
- Prilleltensky, I. (2006). Promoting well-being: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health and human servic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3(66): 53-60.
- Roffey, S. (2013). Inclusive and exclusive belonging: The impact on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30(1): 38-49.
- Smith, Jan Pieter, & Hoekstra, Rutger. (201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Statistics Netherlands*, 1-106.
- VanderWeele, T. J. (2019). Measures of Community Well-Being: a Templat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Well-Being*, 2(3): 253-275.
- Wallace, C., & Pichler, F. (2009). More participation, happier society? A comparative study of civil society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 255-274.

김 세 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영향요인분석: 조직형태 간 비교 및 사회적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소멸, 사회적 경제, 고용정책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구특성 간 비교를 중심으로”(2022, 주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의 조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연계 서비스에 관한 사례연구”(2021, 주저), “사회적기업의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영리·비영리기업 간 사회적성과 비교를 중심으로”(2020, 주저) 등이 있다(swkim2002@skku.edu).

한 창 목: 현재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실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중간지원조직의 네트워크 관리와 효율성 -기초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를 받았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관리, 조직 간 네트워크, 지방거버넌스, 디지털플랫폼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지방자치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공개 방식과 지표의 방향성 탐색을 중심으로”(2023, 공저), “지방자치단체 소방거버넌스 강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2021, 공저) 등이 있다(magnet5462@gmail.com).

정 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주택관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단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혼합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정도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정책,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혼합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생활권 내 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통접근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22, 교신),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구특성 간 비교를 중심으로”(2022, 교신), “주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기전세주택(SHift)과 민간전세주택의 비교를 중심으로”(2020, 주저) 등이 있다(hjeong@kdi.re.kr).

